

---

- 해양수산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-

# 바다에서 시작하는 혁신성장 활력 넘치는 연안·어촌

---

2020. 2. 27.



해양수산부



## 목 차



I.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.....	1
II.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.....	3
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 .....	5
1. 주력 해양수산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. ....	5
2.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. ..	8
3.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. ..	12
4. 해양수산 현장 <small>수분아</small> 에 안전 제일주의를 뿌리내리겠습니다. ..	15
5. 국제협력 확대와 해양주권 강화로 해양영토를 넓히겠습니다. ....	20
IV. 2020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뀔니다 .....	23

## I.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

- ◇ 선대 확충과 친환경 선박 지원 등을 통해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산업의 신속한 재건 추진
- ◇ 해양플라스틱 및 항만미세먼지 저감, 자원관리형 어업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 조성 기반 마련
- ◇ 불법조업 단속 강화, 섬주민 생활안정 및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등 해양영토의 확고한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

### 1] 해운재건 및 항만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

- (원양선사) 초대형 '컨'선 포함(20척) 131척\* 발주('18.1~'19.12) 등 선대확충과 현대상선 '디 얼라이언스(THE Alliance)' 가입('19.6) 등 서비스망 복원

\* (19.1~10월) 누계 수주액(159.7억불), 수주량(695만CGT) 세계 1위

- (근해선사)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매입후재대선(S&LB, 12개 선사 15척, 1,473억원), 신조보증(5개 선사 12척, 2,978억원) 등 근해선사 지원 본격화
- (친환경 전환)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대체 건조(8척), 설비 설치(스크러버 121척, 평형수처리 52척) 지원
- (항만 인프라) 신항(부산·울산) 확충 및 해양산업 클러스터(부산·광양) 착공, 신항만기본계획 수립('19.8) 등 항만 경쟁력 강화 추진

### 2]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어장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

- (해양환경) 해양플라스틱 종합대책('19.5) 및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('19.6) 수립,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('19.12) 등 해양환경 보호 강화 기반 마련

\* 갯벌법 제정('19.1),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('19.4) 등

- (공간관리) 바다에 대한 개발·보전 수요의 종합관리를 위해 '해양공간 기본계획('19~'28)'을 수립('19.7)하고 해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추진

- (수산자원) 자율휴어제 도입, 금어기·감척 강화 등 수산혁신 2030계획('19.2)을 수립하여 자원관리형 어업체제로 전환 추진
- (어촌 활력) 어촌뉴딜 300 착수('19. 70개소), 청년의 어촌정착 및 귀어창업 지원 등 어촌재생 확산과 귀어귀촌 활성화 추진

### ③ 확고한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의 공고화

- (불법조업 단속)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한중협력을 지속하고 어업지도선 등 단속시스템의 첨단화·고도화에 노력
  - \* 중국어선 불법조업률 : ('17) 9.5 → ('18) 7.5 → ('19) 5.3%
- (영토주권 강화) 독도 종합과학연구 착수('19.3), 국가해양관측망 확충 등 EEZ 및 해양영토 관리역량을 지속 강화
- (섬 주민 생활안정) 도서민 생활연료(유류·가스·연탄·목재펠릿)의 해상운송비 지원\*, 의료서비스 강화\*\* 등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
  - \* (1000cc 미만) 20%→50%, (1600cc 미만) 20%→30% 할인
  - \*\* 의료서비스 : 낙도→낙도·낙후지역 / ('18) 9회 451명 → ('19) 12회 618명
- (해상교통 편의) 노후 여객선의 현대화('19, 250억원/누적 1천억원), 여객선 준공영제 운영으로 연안 여객의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
  - \* 카페리 3척 신조, 이차보전 14척 지원 / 1일생활권 7개, 적자 6개 항로 지원
- (해양안전 확립) 연안·소형선박 및 이용자까지 안전관리 정책 대상 (기존 국제운항 대형선박 중심)을 확대하여 해양사고 피해 저감에 기여
  - \*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: '17년 145명 → '18년 102명 → '19년(잠정) 98명 / 연평균 18%↓

- ◆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해운업계의 경영실적 개선 등 해운재건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미흡한 상황
- ◆ 그간 안전사고 예방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, 어선사고와 수산자원 감소가 지속되어 근본적 문제 해결 필요

## Ⅱ.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### 1 업무추진 여건

① (해운물류) 시황의 소폭개선 예측에도 불구하고, 경쟁격화, 물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선대\*와 항만 경쟁력 확충이 중요한 시점

\* 세계적으로 3,000TEU급 이하 선박의 선복 비중은 20% 미만이나, 국적선사 평균 선대 사이즈는 약 2,700TEU 수준

② (항만) 선박 대형화, 물동량 증가, 항만물류 자동화·스마트 전환 추세\*에 대응하는 신항 인프라의 경쟁력 확충이 필요

\* 로테르담(네), 롱비치(미), 청도·양산(중) 등 자동화로 비용·효율성 제고

③ (수산) 자원고갈·해양오염 등 어업환경 악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과 어가인구 감소·고령화 대비 어촌어항의 활력제고 필요

\* 어가인구(만명): ('00)25.1 → ('18)11.7 / 어촌고령화율(%): ('03)15.9 → ('18)36.3

○ 원물·내수 소비중심에서 수출시장·품목 다변화, 즉석·간편식 등 식품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필요

④ (해양환경) 미세플라스틱 이슈,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 해결 등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환경분야 정책의 발굴 및 관련 산업 육성 등 필요

\* G20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이행체계 채택('19.6월 오사카)

⑤ (해양안전) 지속되는 사고 저감을 위해 선박과 항만 인프라 점검, 연안 재해 예방, 인적과실 저감 등 전반적인 재정비 필요성 제기

○ 수입 수산물 관리,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, 수산물 생산-유통-소비까지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 정비 필요

- ◆ 혁신·포용을 바탕으로 해양수산의 '확실한 변화'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
  - △해운물류·수산 등 주력 산업의 활력 제고, △신산업·스마트화 등 미래 혁신, △삶의 질 개선과 안전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어 5대 과제를 중점 추진
- ① 해운물류, 수산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력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회복과 활력 제고에 주력
  -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회복과 신항 인프라 구축,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체계의 개편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 등 중점 추진
- ②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, 바다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미래 혁신을 차질없이 준비
  - 스마트 핵심선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, 5대 핵심신산업 육성, 창업·R&D확대 등 기술 중심의 성장을 적극 유도
- ③ 해양수산인의 소득·환경·복지 개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연안지역 주민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정책으로 확대
  - 해양수산 종사자의 소득·경영 안정과 근로안전·복지망을 확충하고, 해양환경 오염원의 관리체계와 어촌의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
- ④ 사람-선박-인프라 3개 영역에서 현장 중심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, 수산물 먹거리 위생안전 관리 역량도 강화
- ⑤ 과학화된 해양영토 관리, 국제사회와의 협력 아젠다를 선도하여 글로벌 해양리더로서 발돋움

### 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#### 1. 주력 해양수산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.

◆ 글로벌 물류시장의 경쟁 격화,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하에서 해운물류, 항만 및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

\* 해운업 매출 : ('19) 37→ ('20) 40조원 / 수산물 수출 : ('19)25.1→ ('20)26억불

#### 가. 해운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역량 회복

##### ① 국적선사 경영실적 개선 및 글로벌 Top5 도약 기반 마련

- 현대상선의 '디 얼라이언스' 협력 개시('20.4), 초대형 컨테이너선\* 유럽 항로 순차투입('20.5~) 등을 통해 국적선사 영업이익 흑자 전환 추진

\* 2.4만TEU 12척(대우조선해양 7척, 삼성중공업 5척) 투입

- '우수 선·화주기업 인증' 시행('20.2), 인증기업 항비감면(30~50%)과 세제지원(법인세 일부 공제, '19.12~)으로 안정적 화물확보 여건 조성

##### ② 해양진흥공사의 해운지원 전담기관 역할 강화

- 유동성 위기를 겪는 선사에 대해 운영자금 대출 등까지 보증범위를 확대\*하여 업계 수요에 대응(해양진흥공사법 개정, '20.下)

\* (현행) 자산 취득을 위한 채무보증 → (개정) 계약에 대한 보증까지 확대

- 선박 투자방식 다양화\*, S&LB 방식 확대(일부 선박의 임차종료후 선사 매입의무 폐지) 등 적극적 투자 유도

\* (기존) 신조선, 후순위 투자 → (다양화) 신조/중고선, 선/후순위 투자

##### ③ 해운물류 산업의 규모의 경제 가속화 및 해외진출 가시화

- 중견·강소선사 육성을 위해 연근해 '퀵' 선사의 자율적 구조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, 터미널 통합운영(부산신항 2-5/6)도 추진('20.上)

-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, 방글라데시·미얀마 등 아세안지역 항만 개발·운영시장 진출 추진

## 나. 미래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항만 인프라 확충

### ① 부산·광양·인천 등 중심 항만과 지역 거점 항만 확충

- (부산항) 제2신항의 '22년 착공을 목표로 예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,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민관협업체 운영('20. 연중)
  - \* 서'컨' 피더 1선석('20, 착공), 토도제거('20, 준공), 배후단지 추가 등
- (광양항)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물동량 창출을 위해 배후부지를 확충\*하고, 순환형 항로 구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\*\* 착수
  - \* 세풍산단 배후단지 전환·매입, 3단계투기장 조기공급('30→'27)을 위한 준설사업 추진
  - \*\* 3단계 투기장 전면항로 기본계획 반영('20.6), 묘도수도 항로확대 타당성 검토 추진('20.下)
- (인천항) 신항 3선석 추가('20.下 발주, IPA) 및 배후단지 확충\*으로 신항 운영을 활성화하고, 북항에 대한 항로준설 등 추진('20.上)
  - \* IPA에서 건설 중인 66만㎡ 준공('20.上), 신규 민자사업(94만㎡) 착수('20.下)
- (기타) 새만금항·목포항·동해 묵호항·제주항 등 지역의 거점항만 물류기능을 개선하고, 운영 시설 확충으로 연안경제 활성화에 기여

#### < 지역 거점 항만 주요 시설 확충 사항 >

- (새만금신항) 북측방파호안 착공('20.下)
- (목포항) 신항 자동차부두 1선석 착공('20.下), 항만배후단지(48만㎡) 준공('21.下)
- (제주항) 물류체계 효율화방안 마련('20.上), 외항 2단계 시공사 선정·착공('21.下)
- (동해·묵호항) 방파제('20.준공) 등 신항 조기 확충, 밀폐형 부두개발 추진('20.下)
- (울산항) 1단계 상부시설 착공('20.上), 남항 방파호안 준공('21.下)
- (울릉 사동항) 접안시설 1,025m, 외곽시설 480m('20.下, 준공)

### ②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및 기업유치 활성화

-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
  - \* (인천신항) 1-2구역[1종, 94만㎡] 착공('20.下) / (평택당진항) 2-1단계[1종, 113만㎡] 착공('20.下)
-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과 입주규제 완화 등 참여기업에 불리한 규제의 개선작업도 병행



## 다. 생산·유통·가공·소비, 수산업 수과정의 혁신 추진

### ① 연근해 어업체계를 자원관리 중심으로 개편

- 총허용어획량(TAC) 중심의 어업자원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자원조사 인프라를 강화\*하고 자원평가 대상어종도 확대('19: 45→'22: 60종)

\* 1,600톤 수산자원조사선 1척 신조('20.6, 준공)

-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집중 감척(선망 등 근해75척, 연안 51척)을 추진하고, 금어기 조정\*, 휴어제 지원 등 어획강도 관리

\* 오징어·대구 등 금어기·금지체장 조정(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추진, '20.上)  
대형선망의 3개월 휴어 중 2개월 인건비 지원('20, 1,100여명, 月260여만원)

- 불법어업 행정처분 강화\*, 어항검색제도 도입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, 해상드론 투입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역량도 확충

\* 공조조업 위반시 영업정지 확대 및 허가취소, 정책자금 용자제한 확대 등('20.上)

### ②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·규모화 등 성장기반 확충

- 인공종자 대량생산('18~'22), '종자산업 진흥센터' 지정('20~) 및 고품질 배합사료 개발('16~'25) 등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속

- 대규모 자본의 양식산업 진입 허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(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, '20.8)하고, 고부가가치 어종(참치 등)의 산업화\*도 지원

\* 외해 플랜트형 양식 타당성조사 연구('19.8~'20.3) → 외해양식 모델 검토·개발('20~)

### ③ 생산지-소비지 간 직거래 모델 구축 등 유통선진화

-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물 입점(6개소, '20.3), 위판장 '캠(Cam) 마켓' 도입('20.4) 등 온·오프라인 직거래 유통망 확대

- 산지거점유통센터(4개소), 소비지분산물류센터(인천·호남) 및 수산물 종합유통시설\*의 차질없는 건립과 유통과정에 자동화모델\*\* 도입 추진

\* 부산공동어시장('15~'22, 1,729억원), 서남권수산종합단지('14~'20, 373억원)

\*\* 선상 경매시스템, 스마트 어상자·포장재(유통경로 식별)

#### 4 수산업의 식품산업화 및 수출산업화

-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('20.12)하고,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경향에 맞춘 新수산식품 개발('15~'21) 추진
- 가공·R&D·수출 기능을 집적한 전남 수산식품 수출클러스터 사업(전남, 1,089억원) 착수 및 부산 수산식품클러스터 신규 조성(예타 신청) 추진
- 주요 수출품목(어묵 등) 지원사업\*과 수출지원센터 운영(10개소)으로 수출 활로를 제공하고, 박람회·한류연계 행사 등 마케팅 확대

\* 이물질 선별기, 위생 포장기 등 가공설비 및 원료 구입자금 지원

## 2.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.

◆ 해양바이오, 로봇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

\*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 : ('18) 3.3 → ('22) 5.2조원

### 가. 해양수산 5대 전략 신산업 육성

#### 1 해양바이오·관상어 산업

- 건강기능식품과 의료 소재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해양생명 자원을 발굴하여 기업 등에 제공\*하고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\*\*

\* 바이오뱅크 분양 계획 : ('19) 150 → ('20) 170 → ('21) 200 → ('22) 300건

\*\* 해조류를 활용한 암 진단용 조영제 등 개발 R&D('19~'23, 388억원)

- 기업에 연구설비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임상, 컨설팅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설립 추진('20, 실시설계)
- 수입산이 주를 이루는 관상어의 국산대체,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아쿠아펫랜드(시흥)를 완공\*하고 관상어 산업박람회 개최('20.下) 추진

\* 관상어 테마파크·양식장, 용품 유통·판매시설 집적('17~'20, 150억원)

## ② 해양로봇 및 스마트 장비 산업

- (수중로봇) 건설로봇의 실해역 현장운용(항만 준설공사)으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, 핵심부품 성능향상 추진
- (드론) 불법어업 단속, 적조 모니터링 등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해양여건에 최적화된 드론 개발(~'23) 추진

## ③ 해양치유산업

- 우수 치유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해양치유지구\*를 조성하고, 지자체와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해양치유프로그램 개발

\* 완도('19, 착수), 태안·울진·경남고성('20~, 설계·착수)

- 자원조사·인증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지정하여 해양치유산업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, 자격제도 도입 등 전문인력 양성계획도 수립('20.9)

## ④ 친환경 선박 연관산업

- (LNG추진선박) 연안선박 맞춤형 병커링 기술을 개발하고 재정 지원, 관련 업계 공동 펀드조성 등을 통해 개발기술의 민간 확산 유도
- (수소·전기선박) 범부처 합동 수소기술 R&D 사업('20년 예타 예정)에 참여하고, 전기추진 차도선 및 전력공급시스템 개발·실증('20~'24) 추진

## ⑤ 해양에너지 산업

- (조류) 상용화 시스템\* 등 개발로 도서지역 사용전력(진도 성남도, 약 30가구)의 75% 이상 대체 추진 및 실해역 시험장 조성('17~'22)

\*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시스템('19~'22), 도서지역 조류발전-ESS 융복합시스템 ('19~'21)

- (파력) 5MW급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을 운영(제주, '20~)하고, 어촌·도서지역에 특화된 방파제 연계형 기술을 지속 개발('16~'21)
- (해수온도차) 1MW급 발전플랜트 성능시험장을 키리바시에 구축('20~'21)하여 남태평양 도서국 대상 발전기술 수출기반 마련

## 나. 해양수산 스마트 4대 선도프로젝트 본격 추진

### ①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착수 등 해운물류 스마트화

- 인공지능 기반 자율운항 항해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  
\* ('20~'25, 1,603억원, 해수부·산업부 공동) 자율운항시스템, 기관 자동화, 실증 기술개발
- 스마트 해상물류 관련 실무형 인재양성, 기존 물류인력의 재교육·재취업 지원 등 스마트 인력 양성 및 전환 추진('20~)

### ② e-Nav 시범운영 및 세계기술 표준 선도

-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(e-Nav, 6종\* 개발)의 성능 안정을 위한 실험역 시험·검증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('21)을 차질없이 준비  
\* ①상황 예측경보 ②선박 모니터링(화재 등) ③안전항로 ④실시간 해도 ⑤예·도선 ⑥안전정보
- 세계최초 초고속해상통신망(LTE-M)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 디지털통신기술 등의 글로벌 표준화 논의(IMO, IALA 등) 주도

### ③ 자동화·스마트항만 도입 기반 마련과 기술역량 제고

- 광양항('권' 4선석)에 대한 자동화 도입전략을 마련('20.下)하고, 고성능 '권'자동하역시스템(광양/ '19~'23)을 구축하여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현
- 항만건설의 스마트화 연구로 국내 건설기술 역량 제고  
\* GIS-BIM기술 활용 건설사업 관리 연구('20, 10억), 항만건설기술 첨단화 방안 연구('20, 10억)

### ④ 스마트 양식을 토대로 어업관리·가공까지 스마트화 확산

- 지능형 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아쿠아팜 4.0 R&D를 추진('20.2, 예타신청) 하고, 스마트양식 클러스터\*와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조성(~'20, 피산)  
\* ('19~'21) 부산 기장, 경남 고성 ('20~'22) 전남 신안
- 스마트폰 앱 활용 어획보고시스템 구축\*,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변동 예측모델 개발(~'22) 등 어업·자원관리의 스마트화 추진  
\* ('19~'20) 시범운영(선망·안강망·저인망 등) → ('21~) 업종별 단계적 확대

## 다. 해양수산 창업투자 확대 및 맞춤형 지원

### ① 해양수산 벤처·창업 지원 및 투자활성화

- 창업·투자 컨트롤타워(KIMST), 지역별 창업·투자지원센터(전국 6개소) 운영, 창업콘테스트 등으로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지원
- 모태펀드 규모 확대\*와 수산벤처펀드(2개, 300억원)를 신설('20)하고, 해양수산투자기관 협의회 운영 등으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

\* 해양펀드('19년, 295→'20, 581억원), 수산펀드('19, 1,820→ '20, 2,120억원)

### ② 기업 성장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

- 초기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자금 확대('19:45→'20:127억원), 시제품 제작 및 초기 정착자금 지원
-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R&D\*를 확대하고, 수산물 유통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R&D도 발굴

\* 수산 실용화기술 개발, 수산 연구센터 지원, 어업현장 현안해결 지원사업 등

## 라.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수 있는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

### ①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확충

- 전국 권역별로 체험·교육·산업지원 기능을 갖춘 레저관광 종합시설 (5개소)\*과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형 마리나\*\* 조성 추진

\* (착공) 전북 군산, 강원 고성, 제주 3개소 (설계착수) 전남 보성, 경기 시흥 2개소

\*\* 울진 후포, 진해 명동, 부산 해운대, 여수 웅천, 안산 방아머리, 당진 왜목

### ②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확산

-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('20.7, 결정), 갯벌해설사 육성 등 신규 제도(갯벌생태관광인증, 갯벌생태마을) 도입으로 갯벌 가치 활용기반 마련
- 가로림만 해양정원\* 조성 추진(예타), 국가중요어업유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체험 콘텐츠 발굴\*\* 및 해수욕장 관리 강화 등 추진

\* 해양정원 명칭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(해양생태계법) 개정 추진

\*\* 어촌테마마을 1개소 추가('20, 남해), 어촌체험휴양마을 기반시설 개선('20, 4개소)

### 3.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의 삶의 질을 높ی겠습니다.

◆ 해양수산 종사자의 소득·복지여건을 향상하고, 해양환경과 연안·어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

- \* 어가소득 : ('19) 5.4 → ('20) 5.6 → ('22) 6천만원/년
-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현존량 : ('19) 11.8 → ('20) 10.6 → ('22) 8.3만톤
- 항만미세먼지 배출량 : ('16) 34,260 → ('20) 22,000 → ('22) 16,000톤/년

#### 가. 해양수산 종사자 소득·복지 여건 개선

##### 1 어업인 소득 보전과 수산업의 공익기능 제고

- 어업인의 공익의무 이행(자원회복, 자율휴어 등)을 촉진하는 **공익형 직불제 도입\*** 추진

\* 세부방안 연구용역 → 로드맵 마련, 「수산직불제법」 등 개정

<b>공통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(도서·접경지역 지원)</li> </ul>	<b>어선 어업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경영이양 직불제 (어촌공동체 지원)</li> </ul>	<b>양식 어업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</li> </ul>

- 조건불리직불제의 **대상지역**을 확대('19:도서 2만호→'20:접경지 3천호 포함)하고, **지급단가**를 인상('19: 65 → '20: 70만원)하여 소득보전을 강화

##### 2 수산업 경영 및 어업인 복지 지원 강화

-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('19: 3.26 → '20: 3.48조원)와 저리 변동금리 적용 대상을 확대(어업인·어업법인→일반 수산법인)하고, **어업인 세제감면** 지속\*

\* 수협 준조합원 예탁금 이자소득세,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비과세 일몰('20.12) 연장 추진

- 수산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, 고가장비(양식관리선 등) 구입·임대를 지원\*하고, 여성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도입 연구 추진

\* ('20) 이동수리소 : 약 13,000건 / 수산장비 지원 : 2개소(경남, 전북)

### ③ 선원 인권·복지 수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

-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 침해시 가해자·선사 처벌을 강화\*하고, 외국 인력의 송입 전후 교육 강화\*\*와 관리·감독을 체계화

\* (가해자) 해기사 면허 박탈 / (선사)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및 각종 정부 보조금 제한

\*\* 송입전 교육 점검 : 3개국 15업체 → 4개국 20업체 / 송입후 한국어·승선실습교육 강화

- 외국인 선원 관련 인권교육을 강화하고, 인권침해 발생 시 고충 콜센터 상담과 지방해양수산청 신고를 연계하여 실질적 해결 유도

- 어선원 근로조건을 근본적 개선을 위해 어선원 국제협약\*[어선원노동협약(C.188), STCW-F] 기준을 검토하고, 제도개선\*\*(선원법 등 개정) 추진

\* 3일 이상 조업어선(약 4,400척)에 대해 휴식시간 부여 등 신규의무 발생

\*\* 원양어선원 유급휴가 확대, 재해선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상병보상 개선 등

## 나. 국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

### ①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30% 감축을 위한 쏠주기 관리

- (발생) 폐어구 집하장\* 등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,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등 어구관리 선진화

\* ('19) 9개소, 4.5억원(국비 100%) → ('20) 40개소, 14억원(국비 70%)

- (수거) 도서지역의 집하장 확충, 바다환경지킴이 확대(1,000명) 및 정화운반선(7척) 보급, 어구일제회수 제도\* 등을 통한 수거 역량 강화

\* 지역어업인 참여 폐어구 일제회수 시범사업(인천 장봉도) 및 법제화(수산업법 개정)

- (처리) 폐스티로폼 압축기(2대)와 권역별 前처리시설(2곳)을 보급하고 생산자 재활용 의무 부여 등 처리·재활용 활성화

### ② 항만미세먼지 50% 감축을 위한 배출원 통합관리

- (배출원 관리) 선박기인 배출원 저감을 위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(0.5%, '20.1)하고 대형항만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\*(20.9~)

\* 부산, 인천, 울산, 여수·광양, 평택·당진/황함유량0.1%/정박 시 우선 적용 후 확대('22~)



- 항만기인 배출원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(AMP) 설치 확대('19. 8개소→'20, 24개소) 및 친환경 하역장비 확대\*

\* LNG 야드트랙터 전환('20, 100대), 야드트랙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('20, 315대)

- (친환경 전환) 외항선 대체건조('20, 8척)와 친환경설비 설치('20, 133대)를 지원하고, 관공선('20, 2척)도 친환경선으로 단계적 대체

### ③ 해양생태계 보전·이용의 조화와 해양공간 통합관리 역량 증진

- 해양생물보호구역 추가('20, 제주), 갯벌 관리·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 기존 보호중심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조화로운 이용으로 전환

- 충남·서해EEZ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, 해상풍력 조성시 사전 환경성 검토\*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강화하여 체계적 이용 추진

\* 「해양환경관리법」 개정(해역이용협의→해역이용영향평가) → 하위법령 개정('20.9)

### ④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우려에 대한 대응 강화

- 해양방사능모니터링 조사 정점을 확대(32→39개)하고, 정기운항 선박(우리나라-러시아)을 활용한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 추진

- 후쿠시마 인근 등 일본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방사능 조사(5척/연 1회) 지속 시행

\* ('19.9~12) 대기항선박 5척 평형수 취수 → ('20.1) 원자력안전기술원 분석[최근 3년간 우리나라 해역조사 결과인 자연해수의 방사능 농도 이내(세슘137:0.001~0.003Bq/kg) 확인

## 다. 어촌·어항·연안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

### ① 어촌뉴딜 300을 중심으로 어촌재생 확산과 귀어귀촌 활성화

- '19년 착수 70개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(선착장·대합실 등)부터 조기 준공하고, '20년 착수 120개소는 기본계획 수립과 조기 착공\*에 집중

\*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('20.3) →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('20년下) → 일부대상지 조기착공('20.下)

- 청년귀어·귀촌을 위한 종합 컨설팅 등을 지원\*하고, 유희 양식어장의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「어업권 거래은행(가칭)」 도입방안 검토('20.下)

\* 귀어귀촌박람회·귀어학교 운영, 도시민어촌유치 등 / 청년정착지원(최대 월1만원, 최장3년) / 귀어창업 주택자금 지원 확대 ('19) 500 → ('20) 1,000억원 / 漁울림마을 5개소 추가 지정



## ②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항만 재개발 적극 추진

- 부산북항 1단계\*는 '22년 준공을 위해 미착공 사업을 6월내에 착공하고, 2단계는 사업계획 수립 등 절차 진행을 통해 '22년 착공 추진

\* 전체 준공 전에 보행데크(충장로 횡단구간)와 친수공원 단계별 우선 개방('20.下)

- 인천내항은 사업추진방안\*을 마련('20.下)하고, 영종도 투기장에 영종·청라지구와 연계한 **종합 관광레저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추진\*\***

\* IPA 주관으로 전문가 자문 및 지역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계획(안) 마련

\*\* 세계한상기업을 대상으로 상부시설(상가, 오피스 등)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(IR 4회)

## ③ 도서민 운임지원 확대 등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

- 섬 주민 이용빈도가 높은 단거리·생활구간 여객 운임(40→70%)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화물차량 운임(20→50%)에 대한 지원 확대
-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확대(1일 생활권 1개, 적자항로 1개 추가)하고, 승강설비·진입경사로 등 설치지원\*('20)으로 **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대**

\* 국고여객선 26척(11.2억원, 국고 100%)

## 4. 해양수산 현장 쏠분야에 안전 제일주의를 뿌리 내리겠습니다.

◆ 선박, 항만 등 현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산물에 대한 먹거리 안전관리도 강화

\* 해양 인명피해(명) : ('14) 467 → ('16) 118 → ('18) 102 → ('20) 92(▽10%)

### 가. 선박별 안전위험요소의 근본적 개선

#### ① “어선” ⇒ 설비기준 및 운항관리 기준 강화

- 어선의 화재경보장치 보급\*, 상시조난통신장치 개선\*\*, 원거리 위치 정보수신이 가능한 해상통신망 구축(現100→1,500km) 등 인프라 강화

\* 근해어선 2,700척 중심 무상 보급('20.1 ~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수협 합동)

\*\* 보조배터리 장착 상시조난통신장치 개발·보급 : ('20) 100대

- **낙시어선의 안전성검사 확대**(5년 2회→年1회), **안전요원 승선 의무화** (13인 이상, 야간) 등 안전기준('20.2)과 **기상악화시 운항관리\***를 강화
  - \* 겨울철 풍랑주의보시 출항통제 대상 확대(15→30톤미만), 기상특보시 보고 횟수 확대
- 소형어선 무상점검 등을 위한 **스마트 안전지원센터**를 건립('20, 설계)하고, **노후 원양어선 현대화**를 채낚기·봉수망 등으로 확대\*
  - \* (원양어선안전펀드) '20년 정부130억원 추가출자, '23년까지 총1,700억원 규모 조성

## ② “여객선” ⇒ 선박 현대화 및 운항관리 인력 확충

- **노후 연안여객선 신조대체**를 통한 안전성 강화와 친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한 **현대화펀드**의 지원범위·규모를 확대\*
  - \* (범위) 기존 : 연안여객선 → 확대 : LNG 추진선 등 친환경 화물선  
(규모) 여객선 기존 출자('16~'19) : 1천억원 / '20년 추가 : 여객 450억원, 화물 80억원
- **도서지역 등 운항관리자 미배치 지역의 안전관리 강화**를 위해 **운항관리사무소\*** 신설 및 **운항관리자 재배치**
  - \* ('19) 옥지도, 흑산도, 백령도 등 14개소 설치, ('20) 사랑도, 추자도 등 4개소 설치 예정

## ③ “화물선” ⇒ 위험물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

- **고위험·민감 위험물 법정검사 대상**을 확대\*('20.6)하고, 통과화물 등 **항만내 모든 위험물**을 신고토록 강화(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개정, '20.9)
  - \* (확대 대상) 5.1급(산화성), 6.1급(독성), 6.2급(전염성) 위험물 / 현재 880종 검사중
- **위험물 환적 안전부두 선정**('20.6) 및 **전문인력**(하역안전감독관)을 확충하고,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**전문 교육** 추진('20~)

## ④ “유도선·레저선박” ⇒ 취약시기별 점검·단속을 통한 안전 확보

- ‘**유·도선 해양안전 기동점검단\***’ 운영, **취약시기별 예방점검**으로 안전위해요소 제거 및 **종사자 안전교육** 실시로 사고 예방
  - \* (기동점검단) 해양경찰, KOMSA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) 등 내·외부 전문가 참여
- **수상레저기구 안전 확보**를 위한 ‘수상레저안전법’ 개정\* 추진 및 **레저활동 집중시기**에 지자체-해양경찰청 **합동 단속** 실시
  - \* 안전검사 후 상태유지 의무 신설,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 원거리 활동 제한

## 나. 사람과 시스템이 결합된 해양안전문화 구축

### ① 종사자 중심의 안전역량 강화

- 어업인 안전체험관 확대, VR 체험시설 신설, 이동식 체험차량(3대) 운영 등 체험교육으로 긴급 대응능력을 강화
- 신규선원 양성(해양수산연수원)시 체험위주의 승선실습을 확대\*하고, 실습선(5,200톤급) 신조(~'21)와 함께 훈련 인프라 확충('20, 목포·부산)
- \* 해사고 2학년(9→10항차), 해사고 3학년(6→7항차), 오션폴리텍 3급(5→6항차)

### ② 인적과실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정비

- 복잡하고 분산된 통항흐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「광역 국가해양교통망 구축 기본계획」을 수립('20.12)
- 선박별 위험도(사고이력, 선사관리 수준 등) 평가체계를 도입하고, 고위험 통항로의 안전상태를 평가('20.12)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주기적 점검

### ③ 전 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

- 해양안전체험관 건립(안산 '18.12, 진도 '19.10 착공)을 본격 추진하고, 워터파크·해수욕장 등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(6개소)
- 대국민 해양안전교육과 안전취약계층(어린이·노인 등) 대상 안전문화 체험교육(연 3회)을 실시하고, 안전콘텐츠의 뉴미디어 홍보 추진('20.2)
- 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, 연안사고 30% 줄이기 등 다양한 안전대책 추진
- \* 항포구 차량추락 방지막 설치, 구명조끼 무상대여서비스 등

### ④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 집행 강화

- 음주운항, 과적·과승, 선박불법개조 등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강력히 단속하여 대형 해상사고를 사전에 예방
- \* 해양경찰청-선박검사기관(한국선급 등)간 안전검사 정보 공유 및 시기별 특별단속 실시
- 해운·수산분야에 고착화되어 있는 5대 해양 부조리\*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, 맞춤형 집중단속 추진
- \* ①국민안전저해, ②국고보조금 부정수급, ③기업형·토착비리, ④갑질행위, ⑤채용·선거비리

## 다. 항만·어항·연안의 재해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

### 1] 노후항만 리뉴얼과 재해안전항만 구축 추진

- 선도사업인 광양항 낙포부두는 리뉴얼 사업 기초조사 용역에 착수('20.3)하고, 노후항만의 리뉴얼 방향을 정립('20.下)
- 재해방지시설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(방파제 등 5개소)하고, 정비계획 보완('20~'21, 60억원)을 통한 재해안전항만 신사업 발굴 추진('20.下)

### 2] 항만·어항시설 내진보강 및 연안정비 고도화

-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항만·어항(104개, 6.3%)의 내진보강('20. 31개소)을 추진하고, 6개 파랑 관측망을 추가 설치·운영('20.下)
- 침식·침수·월파 등 원인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, 친환경 기법 확대 및 추진방식 다변화 등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('20~'29) 본격 시행  
\* '20년 해수욕장 연안정비 등 13개 국가(639억원) 및 48개 지자체 사업(598억원) 추진
-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사고·위험지역 등 연안안전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'연안안전지수' 도입(연안안전활동 위험도 평가체계 개발, '20년 7.7억원)

### 3] 항만 근로자의 현장 안전을 보장

- 작업구역내 통제시설 설치와 도로·보행 안전 시설물을 보장하고,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주기적(반기) 안전점검 등 현장 관리를 내실화
- 야드트랙터 줄음방지장치 사용 확대('19: 부산항만공사 → '20: 他공사), IoT 기술을 활용한 항만 안전기술\* 개발 등 작업자 안전 보장  
\* 항만근로자 상시 착용 장비에 IoT장비를 부착, 근로자↔관제센터↔관리자 등을 연결

### 4] 현장 중심의 구조·안전체계 고도화

- 해양경찰 전문 구조·구급 인력 확충 및 첨단장비(무인잠수정·드론 등) 도입, 파출소 잠수장비 지급 등 구조형 조직\*으로 전환  
\*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책무로 명시한 「해양경찰법」 시행('20.2.21)
- 대응세력 지시시간 관리제\* 도입 등 출동·도착시간 관리 강화 및 다양한 상황 가정 불시훈련을 통해 초기대응 신속화 도모  
\* 신고 접수부터 이동지시까지의 소요시간 관리를 통해 사고위치파악 시간 최소화

## ⑤ 민·관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

-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「민·관·군 합동 수난대비 기본훈련」 및 신속한 사고현장 도착과 구조대원 대응력 제고를 위한 FTX 실시
- 체계적 구조본부 운영과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매뉴얼\* 개정 및 구조구난·수상레저 전문기관(해양구조구난공단, 한국수상레저안전공단) 설립 추진
- 한국해양구조협회 중심 민간세력 통합 관리 및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 지원을 위한 조례\* 제정 확대 등 민·관 협력 강화

\* 수난구호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 조례 제정(전국 78개 연안지자체 중 58개 제정 완)

## 라.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

### ① 양식어장 재생 및 위생관리 강화

- 과밀·노후화된 양식어장의 환경 재생을 위한 기본조사('20, 20억원)를 실시하고, 향후 10년간('21~'30)의 어장 재생사업 추진\*을 준비
  - \* 어장정화, 품목별 적정 시설량 등을 고려한 어장재배치·조정 등 재생 유형을 도출
- 사료·어구 등의 친환경 인증·등급기준을 마련('20.下)하고, 순환여과·바이오플락 등 친환경 용수 처리 시설 보급('20, 290억원, 18개소)
- 양식장 HACCP 등록을 확대('19:237→'20:267개소)하고, 양식장 약품의 안전기준 추가 신설\*과 기존 허가약품의 안전성 재검증('20, 66개) 추진
  - \* ('18) 11종 → ('19) 12종 → ('20) 13종 → ('21) 15종 → ('23) 18종

### ②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

- 위판장 등에 저온경매장 및 자동선별기 확충, 저온차량 지원 등으로 저온유통체계를 구축\*하고 청정위판장도 건립(고흥, '20)
  - \* ('20) 저온경매장 3개소, 자동선별기 6대, 저온차량 20대 → ('21~) 확대 추진
-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\*, 기동단속반 '암행漁사'(수품원, 18명) 운영으로 대형화·조직화된 원산지 위반 행위의 단속 강화
  - \* ('20.4)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 3개 추가(12→15개)
- 수산물이력제 의무화(생굴·굴비) 시범사업을 추진(3개년, '19~'21)하고, 의무화('22)를 위한 고시 제정 및 대상 추가 확대 추진

## 5. 국제협력 확대와 해양주권 강화로 해양영토를 넓히겠습니다.

◆ 해양수산 국제규범 선도와 협력성과를 창출하고, 불법 외국어선 단속 등 해양영토 수호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한 해양안보체계를 구축

\* 세계수산대학 설립, 차세대 쇄빙연구선 도입 등 핵심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

### 가. 국제사회 협력 아젠다 선도

#### ① 국제 불법어업 근절과 세계수산대학 설립 추진

- 미국의 예비 IUU(불법·비보고·비규제) 어업국 지정 조기 해제\* 이후 항구적인 IUU 방지를 위한 어업분야 3대 국제협약\*\* 비준 추진

\* '17.12월 우리 원양어선 2척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 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미국에서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('19.9), 4개월 만에 조기 해제('20.1.21)

\*\* ①항만국조치협정(PSMA) : IUU선박에 대한 검색 규정(우리나라는 '16년 비준)  
②어선안전협정(Capetown Agreement) : 어선안전을 위한 선박건조·검사 기준(미비준)  
③어선원노동협약(C.188) : 어선원 근무조건(휴식시간 등) 권리보장기준(미비준)

- '21년 FAO 총회('21.6)에서 세계수산대학(WFU) 설립 승인을 목표로 FAO와 공동 시범사업 개원('20.3) 등을 차질없이 준비

#### ② 신남방, 신북방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

- 아세안 주요 협력국(베트남, 인니 등)과 해양수산공동위를 구성하고, 한나라호(한국해양대 실습선) 양여('20.上, 베트남) 등 실질적 협력 개시
- 新남·북방 국가 초청 연수업무 개선, 해양수산 ODA와 연계한 해외항만진출 방안 개선 등 해외항만 수주성과 창출에 노력

#### ③ 극지연구 강화 및 국제기구 진출 확대

-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\*를 추진('20, 예타)하고, 산업적 성과창출을 위한 극지연구 실용화센터 구축('19~'21, 185억)

\* 차세대 쇄빙연구선 : (쇄빙능력) 1.5m/3노트, (내한능력) -45°C, (규모) 11,500톤급



- **대양·심해저 국제 공동연구\***를 추진하고, 해양광물·생명자원 조사와 자원선점을 위한 **대양·심해저 탐사 확대**

\* 美인도양 관측시스템 유지보수('20), 인도양 세이셀-차고스 수온약층 융기해역 공동연구('21)

\*\*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우선채광지 선정(~'20), 심해열수공 탐사('17~'21, 170억) 등

- <sup>국제해사기구</sup> IMO 사무총장 배출, A그룹 이사국 10연임, <sup>국제항로표지협회</sup> IALA 이사회 및 <sup>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</sup> IOPC 추가기금 의장국 등의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선도역할 수행

\* IMO공동 한국해사주간('20.4) 개최, 아·태 항만국통제위 개최('20.12) 등

## 나. 해양영토 관리의 과학화와 체계화

### 1 독도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강화

- 제4차 독도기본계획 수립('21~'25), 입도 안전성과 대국민 관심 제고를 위한 독도 입도영상시스템(실시간 확인 가능) 설치
- 독도 주변해역 생태계·형성원인 등 해양과학조사를 추진하고, 강치 상설전시 등 독도생태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연구조사도 확대
- 독도 탐방(사회적 배려층, 국내 외국인 등),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사업\* 등 영토주권 공감대 확산

\* 독도 관련 학술·홍보 민간단체 대상 지원(1개 단체당 최대 3천만원, 4개 단체)

### 2 무인도서 관리 및 해양관측·관리 역량 강화

- 드론·위성의 입체적 활용, 보전과 이용조화, 민간역량 활용 등을 포함한 '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('20~'29)'을 수립
- 위성(천리안 2호 해양탐재체, '20.2), 국가해양관측망 확충('19, 134→'20, 136개소)으로 관측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고, 예측모델\*을 고도화

\* 빅데이터 기반 해양변동 예측기술 개발 R&D('22~'28, 1,643억원) 재추진

### 3 해양수산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

- 해양안전 및 해양경비력 향상을 위한 해수부-해군-해경 협력 R&D 추진 및 수중통신 등 해양수산 R&D 성과의 공동 활용 확대

- 해양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,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 해소, 무인도서 관리에 해경, 해군 등과 협력체계 활용

## 다.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강력한 해양안보체계 구축

### ① 불법 외국어선 강력 대응 및 전략적인 해양주권 수호

- 불법 외국어선 대형화에 따른 단속전용 함정\* 등 신장비 개발, 해역별 맞춤형 단속 강화 및 중국 정부와의 공동대응체계\*\* 확대

\* 대형 불법어선에 직접 계류 단속이 가능한 300톤급 전용함정 2척 도입 추진

\*\* 한·중 외교회의(年 7회) 및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(4월) 통해 양국 공조 강화

< 주요 해역별 불법 외국어선 대응 방안 >

NLL 해역	서해 집단침범	동해 북방 어장
고속 선외기 보트 등 신종 수법 대응 전술과 그물총 등 효율적 대응 장비 개발	물리적 저항에 대한 기동 단대 운용 및 가용 장비 최대 활용 적극 대응	동해 북상 중국 어선 릴레이 감시, 월선조업 엄단 및 긴급 피난 시 불법행위 감시 철저

- 전통적 황금어장인 동해북방수역(대화퇴)의 전략적 선점을 위해 전담 경비함\* 3척 확보 추진 및 독도 우발상황 대응능력\*\* 강화

\* (진행) 3000톤급 1척, 설계 진행 중 / (추진) 3000톤급 2척 추가 확보 추진

\*\* 日 도발에 신속대응을 위해 고속경비함(2척) 도입 ('21년 신규 예산 확보 추진)

### ② 광역 해역에 대한 첨단화된 모니터링 체계(MDA)\* 구축

\* MDA : Maritime Domain Awareness, 광역 해양 정보·상황 인식 체계

- 외국 불법선박·관공선, 테러, 해양재난 등 국가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24시간 광역감시체계\* 구축, 이상 징후 발생시 선제적 대응

\* ① 인공위성·드론 등 첨단 감시망 도입 ② 고성능 열상카메라 등 경비함정 감시 장비 보강 ③ 15개 시스템 정보 빅데이터화, AI 기반 시각화 모니터링 시스템

- 해양정보 오픈 플랫폼을 구축, 해수부·해군 등 국내·외 유관기관\*과 정보 공유·협업 및 일반 국민에게 맞춤형 해양안전 정보 제공

\* (국내) 해수부·해군·기상청·외교부 등, (해외) 미·중·일·러 등 주요국 해양경찰기관



## IV. 2020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

### 1. 생동감 넘치는 해양수산

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회복	수산업의 성장 산업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우수 선화기업 인증제 도입('20.2) :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, 법인세 일부 공제 등 혜택부여</li> <li>■ 해양진흥공사 보증범위 확대(계약보증 포함) 추진('20.下)</li> <li>■ 부산신항 2-5, 2-6 통합운영사 선정('20.上)</li> <li>■ 배후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불리한 규제 완화('20.上) : 개발부담금 완화, 실수요자 배점 확대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물 입점('20.3)</li> <li>■ 위판장 캠(cam) 마켓 시범운영('20.4)</li> <li>■ 불법어업 적발시 정책자금 융자제한 기간 확대 등 행정처분 강화('20.下)</li> <li>■ 어구어법 규제완화 시범사업('20.下, 대상단체 추가 선정)</li> <li>■ 연근해어선 감척(근해 75, 연안 51척)</li> </ul>

### 2. 미래로 도약하는 해양수산

신산업 육성	해양수산의 스마트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제공 확대 : 종 목록 및 서식지 정보 → 효능 정보 등 포함</li> <li>■ 아쿠아팻랜드 완공(시흥, '20.下)</li> <li>■ 국립해양과학관 개관('20.5, 경북 울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(LTE-M) 및 e-NAVIGATION 시범운영('20~) : 최대 100km 해상까지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이용 가능</li> <li>■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 구축 : 선망, 안강망, 저인망 등 시범운영</li> </ul>
창업투자 지원 확대	누구나 쉽게 즐기는 해양레저관광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산벤처펀드 신설(2개, 300억원)</li> <li>■ 해양모태펀드 규모 확대('19: 295 → '20: 581억원)</li> <li>■ 창업기획자 4개사 운영</li> <li>■ 기술사업화 자금 확대('19: 45 → '20: 127억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서남해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('20.7 결정)</li> <li>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('20.上, 예타 신청)</li> <li>■ 마리나업 등록·변경 수수료 폐지('20.1)</li> <li>■ 어촌테마마을 1개소 추가(남해, '20)</li> </ul>

### 3. 함께 잘사는 해양수산

어업인·어촌 소득안정	도시민 편의 증진	해양환경 개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소득세 감면범위 확대('20.上) : 3천만원 → 최대 8천만원(어로 5천 양식3천)</li> <li>■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인상(65→70만원) 및 대상 확대(접경지역 포함)</li> <li>■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('19: 3.24 → '20: 3.26조원)</li> <li>■ 어촌뉴딜 300사업 120개소 추가 선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도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('20.1) : 단거리·화물차 운임 20→50% 지원</li> <li>■ 도시민 여객선 승선 절차 간소화('20.1) : 사진정보로 신분증 확인절차 같음</li> <li>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확대 : 보조항로 운항 국고여객선 26척('20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5대 대형항만 배출규제해역 지정('20.9) (부산, 인천, 여수·광양, 울산, 평택·당진)</li> <li>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(0.5%) 강화</li> <li>■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 신설('20.1)</li> <li>■ 공공선박의 친환경 건조 의무화('20.1)</li> </ul>

### 4. 안전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바다

안전 관리 강화	수산물 위생 확보	국제협력 강화 및 해양영토 수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낚시어선(13인 이상) 구명뗏목 설치('20.1)</li> <li>■ 연안여객선 구명조끼 비치 확대('20.1) : 성인·어린이용 → 유아용 포함</li> <li>■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('20.5)</li> <li>■ 화재경보 장치 보급(2,700척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양식장 사용약품 안전기준 확대(2종 추가)</li> <li>■ 양식 사료·어구 등 자재의 친환경 인증 및 등급기준 마련('20.下)</li> <li>■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(3개 추가)</li> <li>■ 위판장 등에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: 저온경매장 3개소 자동선별기 6대 저온차량 20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'세계수산대학' 설립을 위한 FAO 공동시범사업 개원('20.3)</li> <li>■ 실시간 독도 입도영상시스템 설치</li> <li>■ 독도 강치 상설 전시관 운영</li> <li>■ 베트남에 '한나라호'(한국해양대 실습선) 양여('20.上)</li> </ul>